
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(안)

(2018 ~ 2022)

2018. 3.



여성가족부

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

목 차

I.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	1
II. 그간의 성과와 한계	2
III. 제3차 기본계획 수립환경	5
IV. 제3차 기본계획 개요	10
V. 정책과제	13
VI. 과제별 소관부처	27
VII.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부대의견	33

I .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

□ 수립배경

-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시책을 담아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,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('13~'17)이 만료되는 시점
- 1,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,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5년을 이끌 제3차 기본계획('18~'22) 수립 필요

<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(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)>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□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
- 「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」 실시('15.7~8월)
-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추진('17.5~11월, 한국여성정책연구원)
 - 분야별 의제발굴을 위한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회의(총7회)
- 관계부처 1,2차 의견수렴('17.10~11월)
- 부처 및 지자체, 현장, 정책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('17.11월)
-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('17.11월)
-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(위원장: 여성가족부 차관) 개최('17.12.12~15)
-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 심의 · 확정('18.2.12)

Ⅱ. 그간의 성과와 한계

1 그간의 성과

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구축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을 제정('08.3)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의 법적근거 마련

* 법 개정('11)을 통해 다문화가족 범위를 “출생 시 한국인 + 결혼이민자(또는 귀화자)”에서 “인지 또는 귀화 한국인 + 결혼이민자(또는 귀화자)” 까지 확장

- 「제1·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」을 통해 종합적·장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,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('09,'12,'15)를 통해 기초 통계자료 구축

-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총괄, 부처 간 유사·중복 사업 조정 등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

*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('14.1), 결혼이민자 취업지원방안('14.12),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종합대책 수립('16.3)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 수립 및 사업 조정 추진

②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법·제도 마련

-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('07.12)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·등록제 도입, 사기결혼 피해 예방 등 관리 강화

- 결혼상대국과 협의체(중국, 필리핀 등 7개국)를 구성하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공조수사 및 불법소지 업체 단속 강화 등으로 국제결혼 피해 감소

* 피해상담건수(소비자원) : ('14) 603건 → ('15) 431건 → ('16) 376건

3]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, 상담, 가족통합교육 등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

* 혼인지속기간 ('12) 8.8년 → ('15) 9.8년¹⁾

- 직업훈련, 취업지원,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·경제적 참여 활성화

* 결혼이민자 고용률 : ('12) 47.4% → ('15) 50.7% → ('16) 52.3%,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: ('12) 26.0% → ('15) 37.8%

-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지원을 통해 취학률 향상, 학업중단률 감소 등 학교생활 적응도가 향상

*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향상(초등 98%, 중등 94%, 고등 90%)되고 있으며 차별을 경험한 비율도 감소('12년 14% → '15년 9%)

4] 다문화수용성 제고

-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,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도모

*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'12년 51.17점에서 '15년 53.95점으로 소폭상승

- 학계·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

* '13~16년 다문화가족포럼 8회, 학술대회 6회 개최

1) 혼인지속기간, 월가구소득, 다문화가족자녀의 취학률 및 차별경험 비율은 '다문화가족실태조사' 결과를, 결혼이민자 고용률은 '외국인 고용조사' 결과를 인용

□ 초기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재편 필요

- 장기정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,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민자 · 귀화자의 초기 적응 지원 중심으로 운영
 - 정착주기 장기화로 다양한 가족유형(한부모 등)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강화 필요
 - 다문화 가정폭력에 대응하여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

“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폭력의 피해 대부분이 다문화 여성과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. 다문화가정 안전장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”(17.9월, 이데일리)

-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청소년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영 · 유아, 취약계층 자녀 중심 정책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 및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강화 필요
 - 또한, 성장 배경이 상이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 필요

□ 중장기 관점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· 시행 필요

-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은 미진한 상황
- 교육, 홍보 등을 통해 개별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주력하였으나, 향후 법 · 제도 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 필요

Ⅲ. 제3차 기본계획 수립환경

1 다문화가족 현황

□ (규모)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31.6만 가구(가구원 96만명)으로 전체 가구대비 1.6%(가구원 1.9%)를 차지하며 증가세가 점차 둔화

○ (가족구성) 내국인+결혼이민자가 37%(11.6만 가구)로 가장 높고, 내국인+귀화자 25%(7.8만 가구), 귀화자+귀화자 15%(4.7만 가구), 내국인+다문화가족 자녀 10%(3.3만 가구)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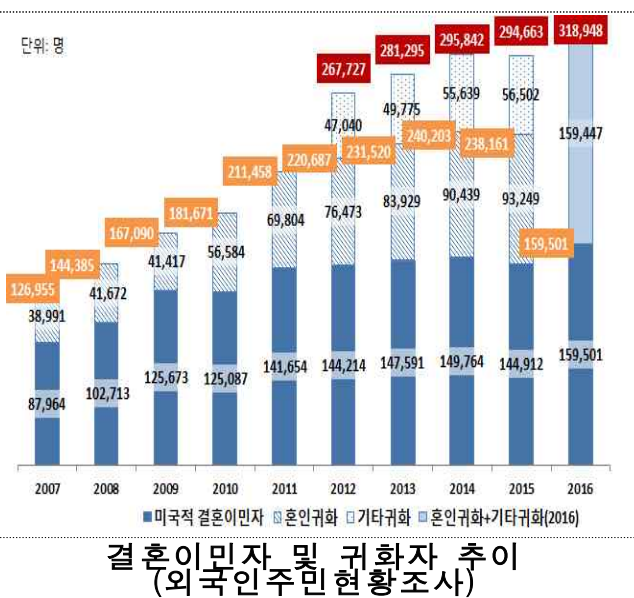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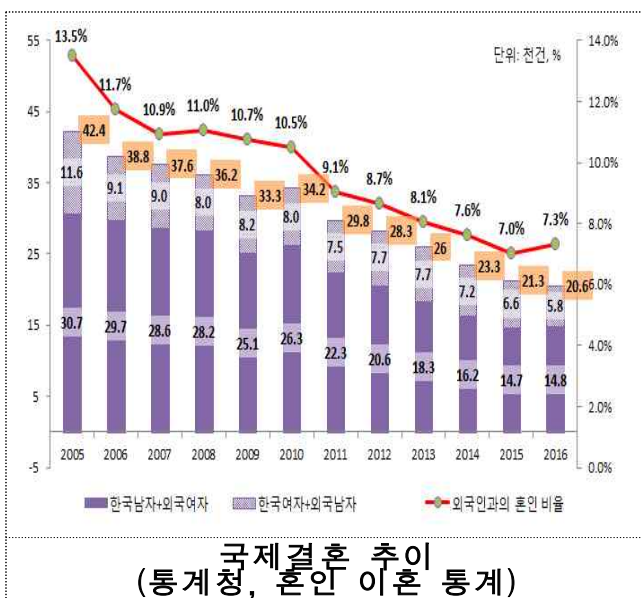
< 다문화가족 범위(다문화가족지원법)>

- 한국인(출생·인지·귀화 등 불문)과 결혼이민자(외국인)로 이루어진 가족
- 한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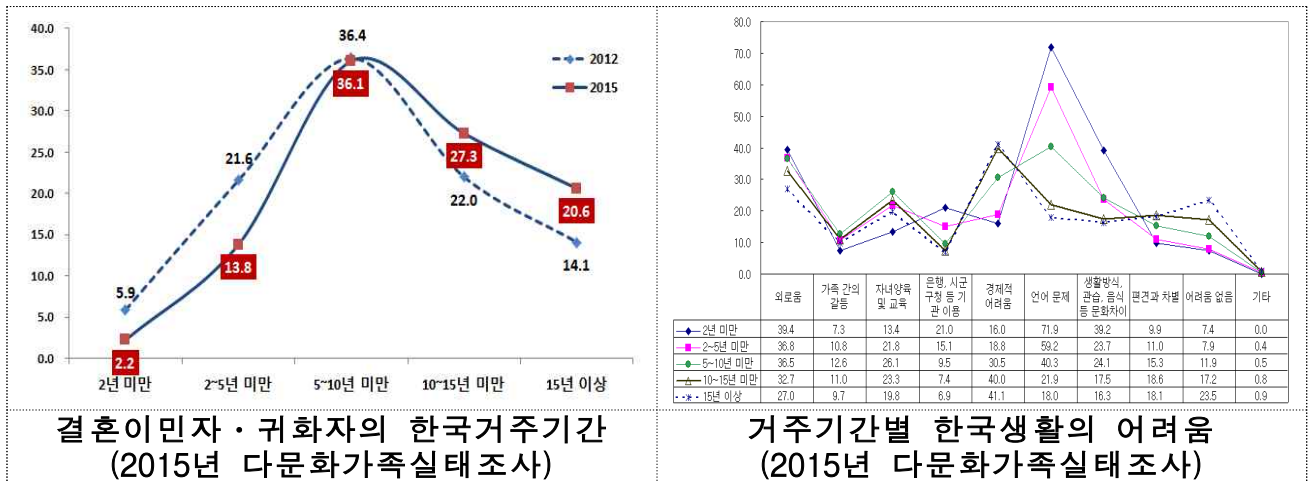
○ (거주지역) 경기(29%), 서울(22%), 인천(6%) 등 수도권에 주로 집중

□ (결혼이민자 및 귀화자) 국제결혼의 감소추세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증가세도 점차 둔화

○ (구성) 혼인건수의 감소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규모는 정체하는 반면, 혼인귀화자는 지속적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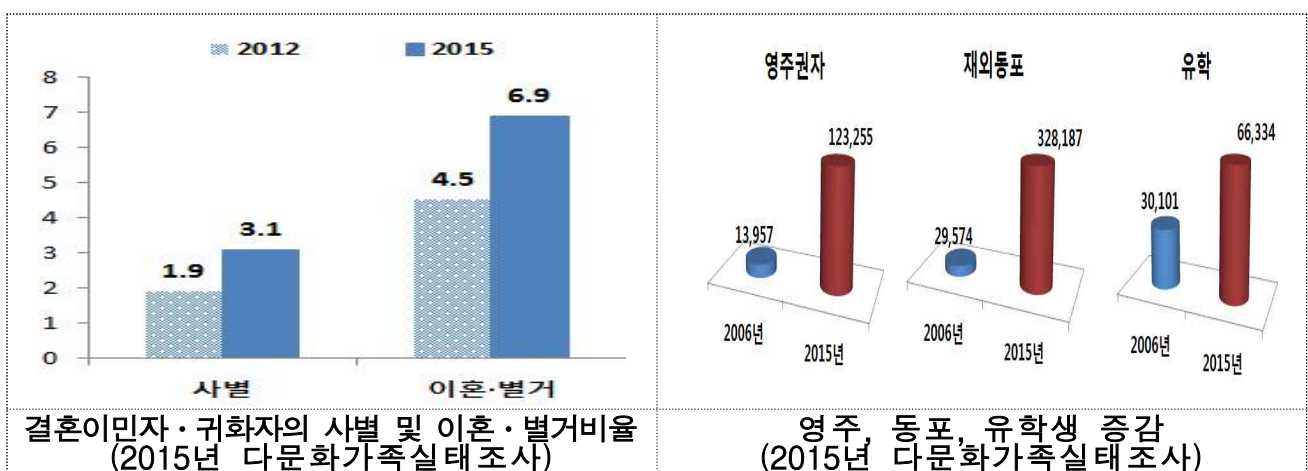


- (국적) 중국출신이 절반이상(55%, 한국계 중국인 11만, 중국인 6.4만)을 차지하며, 베트남(6.6만명, 21%), 필리핀(1.7만명, 6%) 순임
- (정착기간) 10년 이상 장기 정착비율이 증가('12년 34%→'15년 48%) 하고, 5년 미만 단기 정착비율은 감소('12년 27%→'15년 16%)
 - 이에 따라, 언어·문화차이에 따른 어려움은 감소하고, 자녀양육 및 경제적 어려움은 증가



□ (가족유형) 가족관계 갈등사별*로 1인 가구, 한부모 등으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, 한국 체류 외국인(유학생, 재외동포 등)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

*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간 평균연령차이는 10세로 노년기에 진입하는 배우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별 가능성도 커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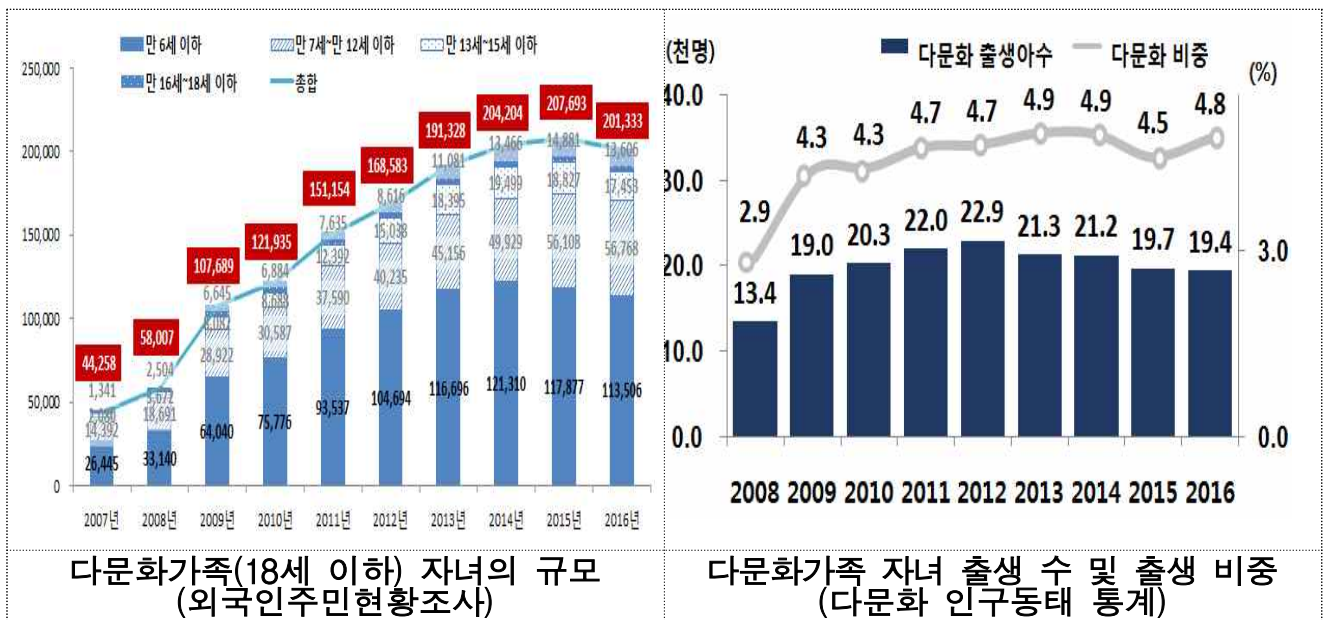
① 초기적응 중심에서 장기 정착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발굴과 확대에 집중 필요 ② 한부모 증가 등 다양한 가족관계 발생에 따른 지원 및 가정폭력 등에 대응하는 인권 강화 방안도 마련 필요

2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와 특성

□ (규모) 다문화가족 자녀수(18세 이하)는 약 20만명으로 증가율은 둔화추세이나, '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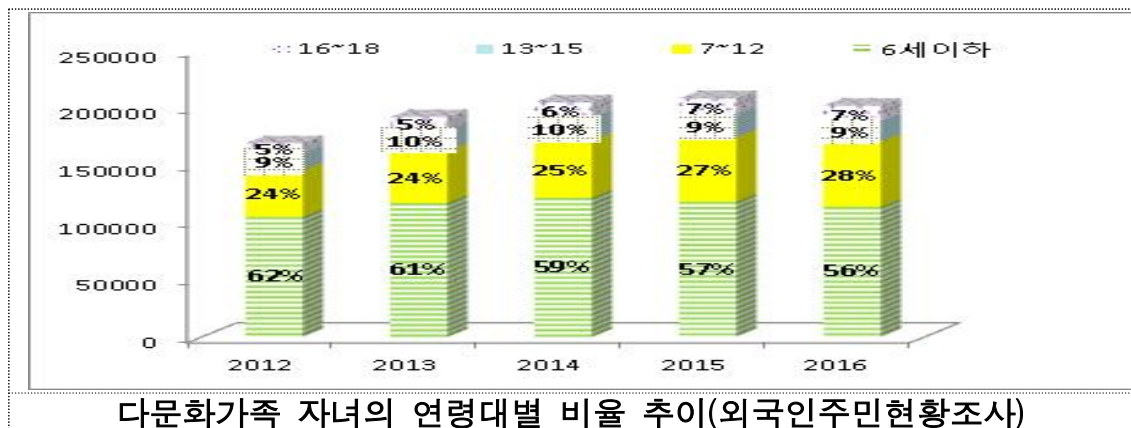
○ (출생) '12년(22만명) 이후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, 전체 출생아 대비 다문화가족 출생 비중은 줄곧 4~5%* 유지

* 다문화가족의 전체가구 대비 비율(1.6%)을 고려할 때 출생아 비율은 높은 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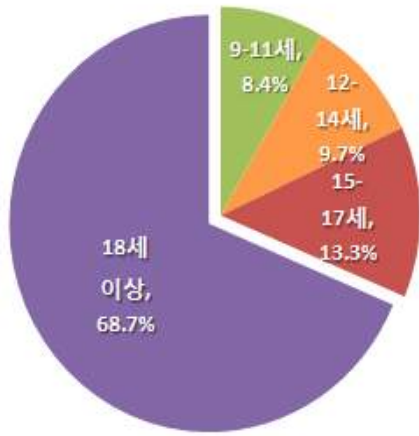
○ (연령) 국제결혼 비중이 높을 때('05~'08)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학령기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초등기(7~12세) 비중이 높아짐

- 향후 5년 이내에 중고생 비중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,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중도 지속 증가 추세('10년 0.44%→'16년 1.68%)



○ (성장배경)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는 전체 자녀 중 15.5% 해당

*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가 61%,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자녀는 24%,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는 15%



-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는 유·초등기 (만 11세 이하) 비중이 높은 반면, 중도 입국청소년은 만 18세 이상 비율이 높은 편(69%)

- 국내성장 자녀와 달리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은 한국어이며, 한국에서의 진학 및 학력 인정, 진로 및 취업 문제에 어려움을 느낌

<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연령분포 >

□ (특성)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학생의 취학률 대비 낮은 수준이며, 학교생활 적응정도는 점차 개선 추세에 있음

○ (취학률 · 학업중단률)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전체 취학률과의 격차가 커지며(중·고등 3%p, 대학교 이상 15%p), 중학교 학업중단률(1.15%)이 전체학생 (0.63%)대비 두배 가량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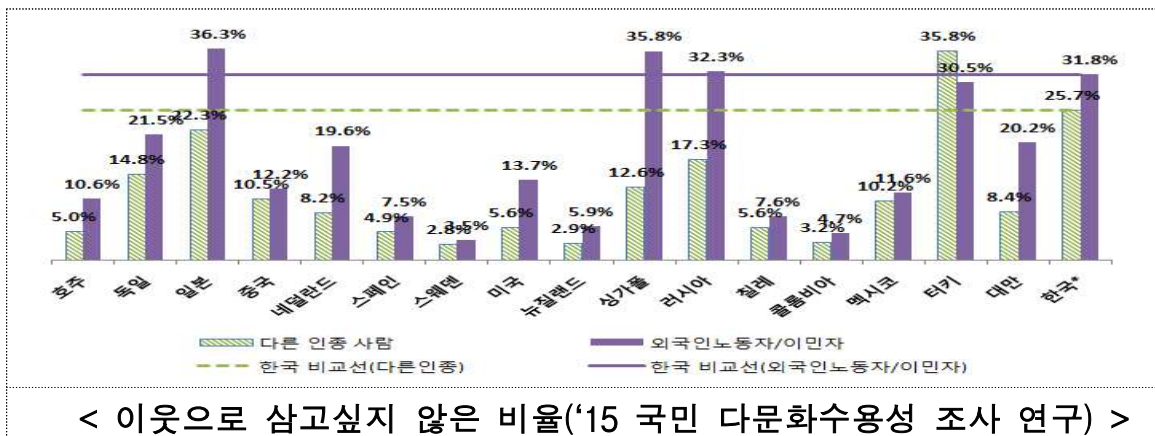
○ (학교생활) 차별 · 학교폭력 경험이 감소하는 등 적응정도가 개선추세에 있으나, 적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또래관계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

- 고민 시 친구 · 동료와의 상담비율이 낮고, 상대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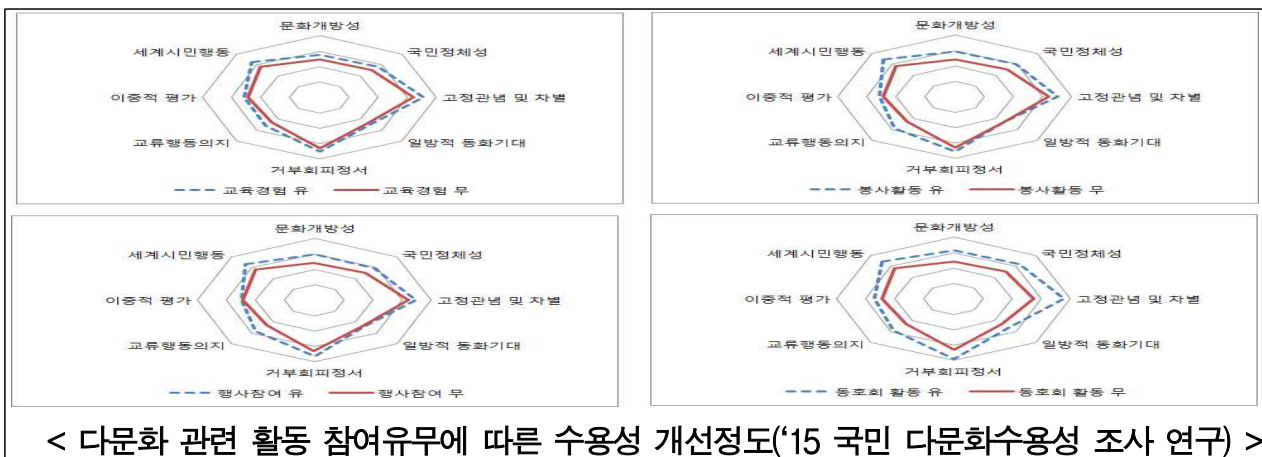
👉 청소년기 자녀 증가에 대응하여 원만한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 하고,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지원 필요

3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성

- (총평) 다문화수용성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으며,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역차별의 정서도 증가하고 있음
-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'다른인종, 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'는 비율이 높은 편
 - 이주민에 대해 한국의 문화·관습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경향('일방적 동화기대')도 커지고 있음



- (개선 가능성) 단일 민족주의 정서가 깊은 만큼 인식 및 태도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나 다양한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수용성 제고 기대
- 이주민과의 접촉경험과 빈도가 높을수록, 다문화교육·행사 등에 참여가 많을수록 수용성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



☞ **다문화 교육을 기본적 소양교육으로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·통합적으로 제공하되, 참여 및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도 마련 필요**

IV. 제3차 기본계획 개요

1

기본방향

비전

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

목표

-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
- 다문화가족의 사회·경제적 참여 확대
-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

정책과제

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

-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(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)
- ②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
- ③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
- ④ 서비스 연계 활성화

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

- ① 자립역량 강화
- ② 취·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
-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

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

-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
-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
-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
-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

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

- 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
- 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
- ③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
- ④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·교류 프로그램 활성화

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

- ①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
- ②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

2

제3차 기본계획의 특징

□ 개요

- “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”, “다문화가족의 사회·경제적 참여 확대”, “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”의 3대 목표 아래 5개 대과제, 17개 중과제 및 70개 소과제로 구성
- 법무부, 교육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 참여

□ 특징

- ‘도입 및 성장기’에서 ‘정착기’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

	도입 및 성장기		정착기
국제 결혼	증가 후 안정화		감소 추세
다문화 가족	지속 증가		안정화 및 장기정착 비율 증가
결혼 이민자	초기적응 및 사회진출 활성화	➡	사회진출 욕구증대 및 경제·사회적 참여 강화
자녀	출생 및 초기 성장		학령기(청소년기) 비율 상승
가족 유형	가족생활 갈등 발생 및 해체증대 가능성 증가		한부모 등 가족형태 다양화
사회적 수용성	관심형성 및 부정적 태도 확산 우려		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

-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강화
 -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긴급상담, 전문상담 및 주거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
 -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,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제도(근로장려금 자격)를 개선하고 지원

- 다문화가족 자녀가 **학령기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학업·글로벌 역량,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**을 강화하고
 -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**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**을 지속 추진
-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적응지원을 지속하고,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
-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**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**

<그간의 정책 vs 제3차 기본계획 비교>

구 분	그간의 정책	3차 기본계획('18~'22)
국제결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결혼이민관 파견 후 중지 · (女현지사전교육) 대면 · (男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)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결혼이민관 파견 추진 · 교육방식 다변화(전화, 우편 등) · 시수 확대 및 인권·상호 존중교육 추가
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상담소) 없음 · (보호시설) 운영 외국인등록해야 입소가능 · (퇴소 후) 임대주택 지원 · (자립지원금) 없음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합상담소(상담, 법률, 의료, 치유, 통역 등) 신규 설치 추진 · 확대추진 외국인 등록여부 무관하게 입소 가능 · 확대 추진 · 신설추진
다문화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족관계 프로그램 운영 ·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'다문화가족 참여회의' 운영(5개 권역 대표) ·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·자녀 장려금 신청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다양화, 사례관리 사업 및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확대 ·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지역 대표성 확대(16개 시도 대표) ·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·자녀 장려금 지원 가능
다문화가족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한국어 능력 향상,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(예비학교 확대,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) 중심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(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이 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, 글로벌 브릿지 사업 등) 중점 추진 · 성장배경이 특수한 중도입국자녀 지원 강화 (레인 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 방식 다양화, 취업사관학교 운영훈련과정 확대)
다문화 수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상별(공무원, 경찰, 종사자 등) 다문화 교육 실시 중점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및 부처간 이해교육 협업체계 강화 · 지역사회 다문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포상,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확산
정책 추진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한 총괄·조정 기능 강화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원회 간 (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- 외국인정책위원회) 연계 강화 ·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실화(처우개선, 지역 여건별 통합 추진 서비스 역량 제고)

V. 정책과제

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

- ◎ 장기정착화에 따라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여 가족관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안정된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권보호 강화

1 결혼이주여성 인권 강화(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)

- 폭력상황에 대한 초기대응체계 상시 가동(여성가족부, 경찰청)
 -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대상 긴급상담 지원, 긴급 피난처 제공 및 쉼터 연계, 해피콜 등 사후관리 강화
 - 지역센터 - 인근 경찰서 간 핫 라인(hot line) 체계 유지
-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체계 구축(여성가족부)
 - 결혼이민자 다수 거주지역 중심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(상담, 법률, 체류상담 등)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운영 추진
-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(여성가족부)
 -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(상담, 의료, 법률, 치료회복지원 등) 확대·운영
 -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시설 입소를 허용 하도록 제도 개선
 - 시설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검토 및 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
-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종사자의 역량 강화(여성가족부)
 - 이주여성 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, 관련 기관 연계 및 긴급조치 등에 관한 교육 강화, 소진예방 프로그램 확대
 - 방문지도사, 멘토링 사업 등 다문화가족지원체계 내에서 폭력 의심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
2

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

-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프로그램(현지사전교육,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) 운영방식 다양화 및 내용 보완(여성가족부, 법무부)
 - 입국 전 현지사전교육을 통하여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하고, 교육참여가 어려운 경우 다양한 방식(전화, 우편 등)으로 상담 지원
 -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시수를 확대하고, 인권·상호존중 교육 추가
-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추진(여성가족부)
 - 각종 불법 결혼중개·인권침해 실태 감시 및 예방을 위해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다수 국가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추진
-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·감독 강화(여성가족부)
 - 한국소비자원·국제결혼 피해상담전화 등에서 접수된 중개업체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민원 다수 발생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강화
- 기관간 협업(다누리콜센터-소비자원-법률구조공단)을 통한 국제결혼 피해자 지원(여성가족부)
 - * 다누리콜센터(피해상담)-소비자원(피해구제)-법률구조공단(법률적 지원)

3

안정된 가족생활 지원

-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사업 내실화(여성가족부, 보건복지부)
 - 다문화가족이 취약·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업 확대운영, 담당인력 확충 검토 및 전문성 강화
 - 희망복지지원단 등 공공단위 사례관리 체계와의 연계 강화

-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**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담 체계 강화**(여성가족부)
 - 3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다양화, 다문화 가족 상담 관련 지역 전문가 풀 마련
 - 초기 부부대상 상호 이해프로그램 및 중기 이후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
- **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**(여성가족부, 기획재정부·국세청)
 -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 마련 및 양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
 -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·자녀 장려금 지원
 - * 이전)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자녀·근로 장려금 신청가능
- **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**(국토교통부, 여성가족부)
 -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다문화 가족 특별분양 자격 부여
 - * 현행)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다문화 가족만을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
 - 주거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분양조건에 대한 홍보 등 정보안내 강화
- **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전 대응역량 강화**(여성가족부, 소방청, 경찰청)
 - 소방서, 가스안전공사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대상 안전교육 실시
 - 원어민 119생활안전교육 강사 양성·파견, 강의 콘텐츠 개발 및 보급
 - 결혼이민자 맞춤형 ‘운전면허 교실’ 운영 및 ‘외국인 도움센터’ 확대
- **119시스템 내 비언어(문자, 이미지 등)적 신고체계 마련**(소방청)
 - 문자, 이미지, 사진 등을 활용한 119시스템 정착 및 홍보
 - 119 신고앱 및 U-119 안심콜 등록사이트의 다국어 서비스 실시

4

서비스 연계 활성화

- 신규 입국자 정보 공유 및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 활성화(여성가족부, 법무부, 지자체 협조)
 -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수료자 등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보*를 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지원센터)와 공유,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안내
 - * 단,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
 - 외국인과의 혼인·전입 신고 할 경우, 담당공무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
-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(여성가족부)
 -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다누리 포털에 실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
 - 결혼이민자 실생활에 필요한 심층정보를 다양화하여 한국생활가이드북(Rainbow+) 제작 및 배포

2

결혼이민자 사회·경제적 참여 확대

- ◎ 결혼이민자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·창업 서비스 등을 내실화 하여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

1

자립역량 강화

-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(여성가족부)
 - 결혼이민자와의 정기적인 멘토링 프로그램, 중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와 내국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
-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추진 및 내실화(여성가족부)
 - * 결혼이민자 자립지원패키지 : 결혼이민자가 미래설계,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

- **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**(여성가족부, 문화체육관광부)
 - 한국어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사업 추진 체계 효율화
 - 양성평등한 관점 및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완 추진
- **사회통합교육 콘텐츠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**(법무부)
 - 취업, 육아 등 결혼이민자의 수요가 높은 콘텐츠를 교육내용에 반영하고, 주말·야간 과정을 확대하여 접근성 제고
- **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안내**(교육부)

2

취·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

- **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기초교육 내실화**(여성가족부)
 -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업기초 소양교육 강화,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새일센터 역량교육 실시
- **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 발굴·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**(여성가족부, 고용노동부, 행정안전부, 지방자치단체)
 - 기관 간(다문화가족지원센터-새일센터-고용센터)연계를 통한 구직자 발굴 추진, 기업수요 맞춤형 새일센터 취·창업 훈련 개발 및 운영
 - 집단상담, 내일배움카드제,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 - 지자체 일자리 사업(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,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)에 결혼이민자 참여 지원
- **결혼이민자 선호 언어·종목을 중심으로 다국어 자격 검정 실시**(여성가족부·고용노동부)
 -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자격시험에 대한 수요 파악 추진, 선호 언어·종목·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어 자격 검정 확대

- **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**(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)
 - 결혼이주여성 정착단계별 농업교육 확대 운영
 - 지역단위 농촌여성조직체 내 다문화여성 분과모임 가입 및 활동 지원
 - * 기초농업기술, 전통·향토음식, 농산물가공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활동 지원
 -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- 내국인 여성농업인 멘토링 결연 지원
 - * 상호소통 교육, 멘토-멘티 협약, 가정경영·생활문화·영농애로사항 등 농촌생활 적응 심층 지원
 -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농가도우미 연계 서비스 제공(지자체)
- **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지원**(중소벤처기업부, 여성가족부)
 - 창업 훈련, 경진대회, 자금지원, 창업보육센터, 단계별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창업서비스 제공
 - 기업가 포럼 운영, 여성기업 확인 지원, 결혼이민자 기업의 공공구매 정보 접근성 제고
 - 새일센터 내 창업매니저 배치로 창업서비스 연계 지원
- **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취·창업 지원**(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)
 -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(인건비 및 사회보험료)
 -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개설 및 자조모임 지원, (예비)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창업공간, 자금, 경영 지원 연계

3

사회참여 기회 확대

- **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**(여성가족부, 지방자치단체)
 -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운영 활성화, 다문화 관련 지역 협의체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에 결혼이민자 참여 활성화

○ **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다양화**(여성가족부)

-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다양화 및 우수사례 발굴·확산,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 역량 강화

○ **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운영**(농촌진흥청)

- * 농촌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촌여성 핵심리더 역량 강화 교육 추진

○ **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활성화**(여성가족부, 문화체육관광부, 법무부)

3

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

- ◎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학업·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하고, 중도입국청소년의 조기적응 및 정착을 지원

1

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

○ **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(다재다능) 확산**(여성가족부)

-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추진, 다양한 운영모형 개발
 - * 다재다능 프로그램: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(부모-자녀 관계 향상, 사회성 발달, 진로코치 등)

○ **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지원 강화**(여성가족부·교육부)

- 진로 및 진학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한 상담 및 자녀교육, 의사소통 등 해결을 위한 부모상담 지원
-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 교사(학교 및 Wee센터 배치)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 실시

○ **외국어,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**(여성가족부)

- * 청소년수련관,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유관기관 등에서 주관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

- **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**(여성가족부·교육부)
 - 자녀양육 지원, 가족상담 등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제공
 -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, 진로·진학 정보 영상 콘텐츠 개발 및 보급
- **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(CYS-Net)를 통해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**(여성가족부)

2

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

- **이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 내실화**(여성가족부, 교육부)
 - 이중언어 인재 DB 등록자 수 확대 및 활용도 제고, 이중언어 인재 진출 가능 분야·직종 등 정보 제공 자료집 제작
 - 다문화학생 대상 ‘이중언어 말하기 대회’ 개최, 이중언어 교재 보급 확대
- **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**(교육부·여성가족부)
 -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멘토링 지원
 - *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과 협업하여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멘토링 연계 추진
 - 언어발달 및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과내용 중 주요 개념 및 어휘를 담은 교과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
 - 지리적 여건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방문교육서비스 강화
- **언어, 수·과학 등 특화된 분야의 다문화학생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브릿지 사업 추진** (교육부)
 - * 글로벌브릿지 사업 :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4개 분야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
- **국제교류 프로그램(청소년국가간교류 및 해외자원봉사단 등) 참여 활성화**(여성가족부, 외교부)
 - 이중언어 재능이 있는 다문화청소년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KOICA 드림봉사단 선발 시 다문화 청소년 가산점 부여

- **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**(교육부·여성가족부)
 - 진로체험지원센터* 중에서 권역별로 다문화청소년 거점 센터를 지정·운영하고, 다문화 학생 중심 진로체험처를 지속 발굴·확대
 - * 전국 17개 시·도에 220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·운영 중
 - 무지개 잡아라, 내일을 잡아라 등 다문화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활성화
 - * ‘무지개잡아라’는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, ‘내일을잡아라’는 중도입국청소년 등 대상 직업교육프로그램
- **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한 진로활동실 확충 유도**(교육부)
 - *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한 학교 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로활동실 구축을 시도 교육청에 권장
- **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**(KOTRA·외교부)
 - 이중언어 능력과 특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년층 대상으로 차세대 무역전문인력(다문화 무역인) 양성
 - KOICA 영프로페셔널(舊 ODA 청년인턴) 선발 시 다문화 청년 가산점 부여
- **직업교육훈련기관(다문화 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솜학교) 운영 지원 및 우수 사례 발굴**(고용노동부)

- **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수준 제고**(교육부, 여성가족부)
 - ‘한국어 교육과정(KSL)’ 개정에 따른 교재개발과 교원연수 실시
 -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 내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대비반 포함 운영
- **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**(여성가족부, 법무부)
 -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,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 및 주말과정 운영 등 참여기회 확대
 - 레인보우스쿨 과정을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여부 검토
 - * Rainbow school : 한국어, 특기적성교육, 문화체험, 교우관계 개선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

- 중도입국자녀의 심리·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**프로그램 운영**(여성가족부)
 - 중도입국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상담 및 사례관리,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통합캠프 운영
-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**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**(교육부)
 - 학력증빙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의 편입학 지원 및 학력심의위원회 활성화
-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**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**(교육부)
 - 특별학급(한국어(KSL) 교육과정 운영 학급)을 다수 운영하는 예비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
 -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'찾아가는 예비학교' 운영, 사후 학교적응 모니터링 실시
 - * 다문화 예비학교 :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
-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등 교육기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**내일이룸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**(여성가족부)
 - * 내일이룸학교 9개소 운영 중(17년 기준)

4

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

- ◎ 다문화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질로써 상호존중에 기반 한 다문화이해 교육 확대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

1

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

- 차별적 법·제도 이슈 발굴 및 개선(여성가족부, 지자체)
 - 지역주민 모니터링단 운영(다문화가족 참여회의,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내 운영 등)을 통한 차별적 제도·이슈 발굴 및 지속 개선 추진
- 다문화 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현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환류 추진(여성가족부)

- **부처 간 다문화이해교육의 협업 체계 강화**(여성가족부, 법무부, 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촌진흥청)
 - 부처별 다문화 관련 교육(다문화 이해교육, 문화 다양성교육, 세계시민교육 등) 콘텐츠 및 전문강사 연계 강화
- **유아교육 및 공교육 기관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**(교육부,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)
 - 누리과정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내용 반영 확대
 - 어린이집 교원(원장, 보육교사)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
- **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**(교육부)
 - 예비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직 과목에 반영하도록 권고
 - 다문화 중점학교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 및 공유
 - 교원연수, 교사연구회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, 다문화 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
- **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**(여성가족부)
 - 기업·학교·단체 등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
 -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운영, 대상(경찰, 군인 등)별 특성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
- **대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**(여성가족부, 행정안전부, 법무부, 국방부, 경찰청, 보건복지부, 지자체)
 -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등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, 교육 활성화
 - 다문화 장병의 군복무 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추진 및 부대 내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

3

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
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(방송통신위원회(방송통신심의위원회))
 - 방송심의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, 인권 및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기 위한 심의 기능 강화
-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(방송통신위원회, 문화체육관광부)
 -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(EBS) 제작 지원
 - 콘텐츠 제작 지원 시 반차별·인권관점에서 제작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제공
- 미디어 모니터링단 운영 및 개선 사례 발굴(여성가족부)
 - *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개선 필요사항 심의요청
-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다각화(여성가족부, 문화체육관광부)
 - 언론 및 민간단체와 함께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및 활동 전개, 공모프로그램 및 캠페인 추진

4

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 ·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

- 지역사회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(여성가족부, 지방자치단체)
 - 지역사회 다문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·포상,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발굴·확산
-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, 운영(여성가족부, 법무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촌진흥청)
 - 이주민-선주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(예: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, 무지개 다리사업 등) 발굴 및 운영
 - 쌍방향 교류체험 프로그램(다문화꾸러미 등) 개발 및 운영
 - 농촌지역 내 다문화 공존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* 다문화 - 비다문화 청소년 융화지원 프로그램 등
- 문화시설(도서관, 박물관 등) 내에서 다문화프로그램 확대(문화체육관광부)
 - * 도서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, 박물관 내 이주민 문화 체험시설 등 조성 및 전시, 미술관 내 제3세계 전시회 등 다문화 작품 전시 확대

5

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

- ◎ 부처 간, 주요 상대국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내실화

1

정책추진체계 간 협력 강화

- 위원회 협력 및 기본계획 연계 강화 (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, 법무부)
 -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-외국인정책위원회 합동운영 추진,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등 연계 등에 대한 간사부처 간 협력 강화
 -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점검 및 환류 체계 구축
-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역량 강화(여성가족부,지자체)
 - 다문화가족 정책협의회 및 다문화 가족정책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정책 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·공유
 - 우수 특화사업 발굴 확대, 일회성·시혜성 사업 지양 유도
-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(교육부, 여성가족부)
 -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
 - * 상담서비스, 강사인력, 학부모교육 등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
-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협력채널 지속 운영(여성가족부)
 - *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발굴·개선 지속 추진

- 지역별 다문화가족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운영 추진(여성가족부)
 - 지역특화 다문화가족 서비스 및 사업 개발 활성화, 서비스 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 추진
 - 지역 여건, 지자체·종사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추진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역량 제고(여성가족부)
 -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, 평가지표 개선 및 개발, 역량개발사업 등 점검 및 개편 추진
 - 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로 안정성 제고 추진
 - 기본사업 및 특화사업 재편방안 마련 검토, 실적시스템의 이용자 친화성 강화

VI. 과 제 별 소 관 부 처

과 제 명		소관부처
1.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		
1-1. 결혼이주여성 인권 강화(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)		
① 폭력상황에 대한 초기대응체계 상시 가동	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, 경찰청	
②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체계 구축	여성가족부 (복지지원과)	
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	여성가족부 (복지지원과)	
④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종사자의 역량 강화	여성가족부 (복지지원과, 다문화가족과)	
1-2.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		
①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방식 다양화 및 내용보완	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, 법무부	
②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추진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	
③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·감독 강화		
④ 기관간 협업을 통한 국제결혼피해자 지원		
1-3.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		
①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사업 내실화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, 보건복지부	
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담 체계 강화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	

과 제 명	소관부처
③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	여성가족부 (가족지원과), 기획재정부·국세청
④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	국토교통부, 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⑤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전 대응역량 강화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, 소방청, 경찰청
⑥ 119시스템 내 비언어적 신고체계 마련	소방청

1-4. 서비스 연계 활성화

① 신규 입국자 정보공유 및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 활성화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, 법무부, 지자체 협조
②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
2. 결혼이민자 사회·경제적 참여 확대

2-1. 자립역량 강화

①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②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추진 및 내실화	
③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	문화체육관광부, 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
④ 사회통합교육 콘텐츠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	법무부
⑤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안내	교육부

과 제 명	소관부처
2-2. 취·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	
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기초교육 내실화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, 경력단절여성지원과)
②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의 지속적 발굴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, 경력단절여성지원과), 고용노동부, 행정안전부, 지자체
③ 결혼이민자 선호 언어·종목을 중심으로 다국어 자격 검정 실시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, 고용노동부
④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	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
⑤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지원	중소벤처기업부, 여성가족부 (경력단절여성지원과)
⑥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기업·협동조합 취·창업 지원	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
2-3. 사회참여 기회 확대	
① 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, 지자체)
②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다양화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③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운영	농촌진흥청
④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활성화	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, 문화체육관광부, 법무부
3.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	
3-1.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	
①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(다재다능) 확산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②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 지원 강화	여성가족부(청소년자립지 원과), 교육부

과 제 명	소관부처
③ 외국어,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	여성가족부 (청소년활동안전과)
④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	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, 가족정책과) 교육부
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(CYS-Net)를 통해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	여성가족부 (청소년자립지원과)
3-2.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	
① 이중언어인재 양성사업 내실화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, 교육부
②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	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, 교육부
③ 글로벌브릿지 사업 추진	교육부
④ 국제교류 프로그램(청소년국가간교류 및 해외자원봉사단 등) 참여 활성화	여성가족부 (청소년활동진흥과) 외교부
3-3.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	
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인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	교육부 · 여성가족부 (학교밖청소년지원과)
② 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한 진로활동실 확충 유도	교육부
③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	KOTRA · 외교부
④ 직업교육훈련기관(다문화 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솜학교 등) 운영 지원 및 우수 사례 발굴	고용노동부
3-4.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	
①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수준 제고	여성가족부(학교밖청소년지원과), 교육부
② 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	여성가족부(학교밖청소년지원과), 법무부
③ 중도입국자녀의 심리·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	여성가족부 (학교밖청소년지원과)

과 제 명	소관부처
④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	교육부
⑤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	교육부
⑥ 다문화청소년 취업사관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	여성가족부 (학교밖청소년지원과)
4.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	
4-1.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	
① 차별적 법, 제도 이슈 발굴 및 개선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, 지자체
② 다문화 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정책 환류 추진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4-2.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	
① 부처 간 다문화이해교육의 협업 체계 강화	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 법무부, 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촌진흥청
② 유아교육 및 공교육기관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	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, 교육부, 보건복지부
③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	교육부
④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서비스 활성화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⑤ 대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	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 행정안전부, 법무부, 국방부, 경찰청, 보건복지부, 지자체

과 제 명	소관부처
4-3.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	
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	방송통신위원회 (방송통신심의위원회)
②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	방송통신위원회, 문화체육관광부
③ 미디어 모니터링단 운영 및 개선 사례 발굴	여성가족부 (여성정책과)
④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다각화	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, 문화체육관광부
4-4.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·교류 프로그램 활성화	
① 지역사회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, 지방자치단체
②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, 운영	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, 법무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촌진흥청
③ 문화시설 내 다문화프로그램 확대	문화체육관광부
5.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	
5-1.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 강화	
① 위원회 간 협업 및 기본계획 연계 강화	국무조정실, 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, 법무부
②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역량 강화	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, 지자체
③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및 지역 내 유관과의 연계 강화	교육부, 여성가족부(다문화가족과)
④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협력채널 지속 운영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5-2.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	
① 지역별 다문화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운영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역량 제고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
VII.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부대의견

2018. 2. 12.(월) 개최된 외국인·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함

☐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

-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

☐ 인종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 필요

-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반차별적, 인권관점에서의 스크린 강화

☐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파악 필요

-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파악 추진